근대화의 일그러진 자화상

광주대단지 '폭동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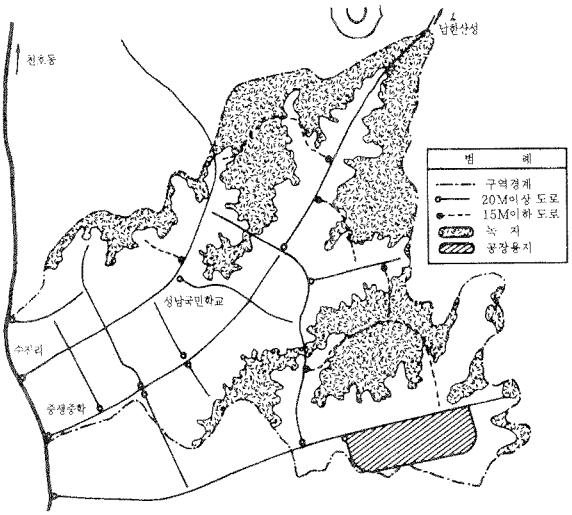
이광일

근대화, 성장과 야만의 두 수레바퀴

서울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 비위생과 가난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복개되고 그 위에 삼일 고가도로가 깔렸던 그 때, 산업화는 우리 사회의 지상명령이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복개된 청계천과 삼일 고가도로는 우리나라 산업화 정책, 특히 도시 정책의 가장 커다란 실패작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연장에서 청계천을 복원하자는 논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서 복원에 따를 도시교통 혼잡 문제, 철거 비용을 둘러싼 논의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문제는 비용과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된 발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됐다는 점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한 생동감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산업입국' 이나 '수출입국' 이라는 모토 아래 밀어붙인 모든 개발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제 더 이상 비용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몰가치적' 으로 보이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인간 삶의 파편화, 그 관계의 파괴에 대한 주목이다. 물론 여기에서 인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 자신의 삶을 꾸려 가는 존재이다.

廣州大團地計劃圖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인간관계의 극단적인 파괴를 자양분으로 한 '한강의 기적' 을 칭송한다. 이구동성으로 '한강의 기적' 을 회고하며 '제2의 한강의 기적' 을 이루자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런 발상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국난극복이라는 모토 아래 매우 강력한 대중동원의 수사가 됐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박정희 신드롬' 같은 '구시대의 유령' 에 대한 맹목적 기대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발상은 과거 권력과 특권을 누렸던 보수적·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타깝지만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여전히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그것은 왜일까? 혹시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들이 근대화·산업화가 뿌려 놓은 화려한 성장의 외피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산업화를 추동하는 논리였던 근대화론은 냉전시기 미국의 제3세계 지배와 포섭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발상에는 사람

들간의 삶의 방식,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사회관계에 대한 고민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수출액, 산업성장율, TV 및 라디오 보급률 등이 일차적인 관심사였을 뿐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부차적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회적 행위는 물론,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성장(률)이라는 잣대에 의해 평가됐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의 파시스트적 지배가 '한강의 기적' 과 무관한 듯 이야기되면서, 오히려 그 놀랄만한 성장 지표에 의해 상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야만성이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기 쉽다. 물론, 여기에서의 야만은 문명과 대비된 자연적 상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야만성은 문명이 심화시킨 비대칭적 사회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인간관계를 유지·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파괴하고자 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개별 행위주체의 양심과 사상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및 구속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위해 등은 인간관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야만성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신시대 때 유행한 장발과 치마길이 단속은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는 야만성의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 삶의 터전인 자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야만성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그렇지만, 그 극치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이 근대화의 뒤안길은 야만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윤이라는 끝없는 욕망에 추동되는 근대화는 야만성의 재생산, 결국 인간의 삶, 그 관계의 파편화를 다른 한 면으로 하며 스스로를 (확대)재생산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산업화가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냉전분단체제 아래서 심화된 정치적 억압과 맞물려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인간의 삶 자체는 심대하게 왜곡됐다. 즉, 성장주의와 매카시즘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생동적인 모든 사회관계들을 분절시키고 파괴했다. 물론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이에서 오는 모든 부담은 그 사회의 가장 저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됐다. 특히 산업화의 초기에는 그 부담이 도시 빈민들에게 곧바로 이전되는데, 바로 그 전형이 지금은 잊혀져 빛 바랜 기억으로 되어 버린 '광주대단지 폭동사건' 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1971년 8월 10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뒷산에는 새벽부터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작은 리본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많은 현수막들이 들려져 있었다.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백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라" "공약사업 약속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등의 문구가 박힌 전단도 배부됐다. 이들은 11시에 주민대표와 면담을 약속한 당시 서울시장(양택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술렁이기 시작, 급기야 "시장이 우리를 사람취급 안 한다" "더 이상 속지 말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약 1만5천 명에 달하는 이들은 순식간에 성난 폭도가 되어 세금독촉장을 쌓아둔 경기도 성남지구 출장소 별관 등 3개의 건물을 불태우고 서울시 광주대단지 사업소와 성남지서를 파괴했는가 하면, 버스 등 차량을 불태우고 이 지역 일대를 순식간에 법외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폭동으로 82명의 경찰관과 50여 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0여 명의 청년이 구속됐다. 폭동은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들어준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점차 날이 저물면서 진정되기에 이르렀지만 이 폭동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나마 정부는 도시빈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폭동이 발생했을까? 60년대 중반이후 산업화로 가속화된 농민층 분해와 그들의 도시 이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도시 빈민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67년 당시 무허가 건물은 23만3천 가구였고 이 건물에 거주하는 도시 빈민은 127만 명에 달했는데, 68년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광주군 중부면 관내에 50만 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위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69년 5월 2일부터 숭인동, 창신동, 옥수동, 금호동, 홍은동, 홍제동 등 고지대와 청계천, 중랑천 등 하천 변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신도시 건설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선입주 후건설' 방침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도로와 교통 편의시설, 최소한의 상하수도 시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조차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이주가 계속되어 71년 봄에는 그 인구가 무려 20만 명에 이르게 됐다. 즉, 최소한의 정지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거의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마치 쓰레기처럼 야산, 밭이나 논 등에 마련한 천막에 가수용됐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가수용된 상태에서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불도저의 움직임과 택지조성 작업을 지켜봐야만 했다.

71년도 봄에는 주거지 등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 이주민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생명을 잃기 쉬웠는데, 심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수용 막사에서 3~4구의 시체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사회법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있는 경우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56.4%를, "약을 먹인다"는 응답이 33.8%를 차지했는데, 소화제와 아스피린이 약의 주종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들은 보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당시 철거민들이 살던 가수용지 생활의 비참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10여 일 간 굶고 부황이 난 임산부가 인육을 먹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소문은 그 진위와 무관하게 당시 광주대단지로 이주한 철거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물질처럼 버려진 이주철거민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이 이주 정책을 추진한 정부 당국의 그 누구도 이들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거기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막막했다. 당시 직장을 갖고 있던 고용인원은 광주대단지에 이주한 20만 명 중 1천3백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였다. 그나마 이 사람들도 교통이 불편해 가족들을 광주에 남겨놓고 서울 등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거여동, 천호동을 경유해 서울로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 버스의 배차 시간도 두 시간에 한 대 꼴이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경우, 서울에서 살 때는 발이 부르트도록 뛰면 그래도 날품팔이를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광주에서는 이것마저 여의치 않아 호구지책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웠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대단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렵다"는 응답이 51.4%, "못 구한다"가 47%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8·10 폭동사태 이후 정부가 부정기

적이지만 양곡이나 밀가루 등을 제공해 호구지책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하루 세 끼를 모두 먹는 경우는 57.1%에 불과했고 그나마 쌀은 13.9%, 보리는 15.9% 정도였다. 아직 다수인 62.6%는 밀가루로 식사를 해결했고, 죽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6.3%에 이르렀다. 이들의 한 달 평균소득을 보면,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35.1%, 5천원 미만이 76.9%에 이를 정도여서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도시 5인 가족의 한 달 생계비가 3만2천5만2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생활고가 어떠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8월 10일, 주민들로 하여금 그처럼 격렬한 저항을 촉발시켰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분양지의 불하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7월 말까지 강제 징수하려 했다는 점, 둘째, 생활고를 감안해 일정 기간 면세하고자 했던 지방세를 거둬들이려고 했던 점 등이 지적된다. 즉, 서울시는 애초 불하가격을 5백 원~2천 원 정도로 책정했고 경기도 또한 철거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3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매과정을 경과하며 불하가격은 8천원~1만6천원 선으로 인상됐고 설상가상 경기도 사무소에서도 원래의 약속과 달리 지방세를 징수하기 시작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폭동이 일어난 11월 8일 집회에서 주민들은 "모이자, 뭉치자! 궐기해 시정 대열에"라는 제목 아래 "대지는 무상으로 하라" "모든 세금을 면제하라"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당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폭동의 원인, 그 표현의 격렬함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의 외곽 빈민가에서 밀려나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신도시' 광주라는 곳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는 그 열악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향후 광주에서 계속 살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날품팔이라도 해서 삶을 이어가겠다는 사람이 30.1%에 이르고 있었지만, 계속 광주에 남아 살길을 찾겠다는 사람들은 그 배가 넘는 67.8%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무원칙한 행정편의적 발상을 앞세워 삶의 의욕을 꺾는 조치들을 취했고, 이

것이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다. 즉, 행정당국의 무원칙한 이주 정책과 약속을 저버린 즉흥적인 조치들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주민들을 벼랑 아래로 내몰았던 것이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인간 이하의 삶을 감수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던 것이고, 그 연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분노한 이주철거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 더불어 산다는 것

광주대단지 폭동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불하지가 책정, 세금징수 등 행정당국의 무원칙한 사업 추진이 그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좀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단지 특정한 지역 행정당국이 보인 무책임성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만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수출지향적 경제 정책이 저임금 · 저곡가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던 관계로, 산업화의 진전에 비례해 농민층의 부담은 가중됐고 그 와중에서 분해된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주, 특히 서울과 도시 외곽으로의 이주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당시 도시빈민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광주대단지 문제도 바로 이런 맥락 위에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도시의 거지는 때깔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적으로 도시는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 꺼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와 그 주변으로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그렇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잠자리와 일자리는 없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이들은 점차 골칫거리로 인식됐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 주변을, 도시 주변의 외곽 산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수출입국을 꿈꾸는 이 나라에서 대외적인 쇼윈도의 진열품이 될 수 없었다. 쇼윈도는 커다란 공장과 그 속에서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 빈민들은 숨겨야 할 대상이었고, 그 적절한 수단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들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창신동, 답십리, 왕십리, 청계천 등에서 자신의 '무허가 삶' 을 꾸리던 이들은 산업예비군으로서 저임금 구조의 최하위에 존재하는 피수탈자였지만, 이제 산업화의 성과를 알려야 하는 '환경미화 작업' 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상징적이지만 이것은 청계천 복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기에서 이들은 인간으로서 취급되기보다 하룻밤 타고나 하얗게 변한 구공탄이 오물이 흐르는 개천에 던져지듯이 그런 천덕꾸러기로 취급됐다.

70년 11월, 청계천 끝자락 평화시장에서 어느 한 재단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것은 단지 평화시장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회관계에 맞서 인간임을 확인하고픈 한 노동자의 처절한 몸짓이었다. 광주대단지에서 발생한 폭동 또한 목적의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집단적 인간 선언이었다. 광주대단지는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 국가권력과 성장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자본,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탕주의자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철거민들이 살 한 평의 땅마저 차지하기 위해 이전투구하는 그들만의 게임장이었다. 서울시로 대표되는 행정당국 자체가 땅장사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신축 부지 마련을 내세운 거대 자본을 비롯해 온갖 땅 투기꾼, 심지어는 전국의 깡패 조직들마저 몰려들어 입주를 위한 '딱지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의 붐'을 선전하는 매스컴의 온갖 감언과 헛소문,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주철거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분루를 직설적으로 표출시키는 것밖에 없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평화시장에서 자신을 불살랐던 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지식인 친구'도 없었으며,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몸뚱이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광주대단지는 과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이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만들고 있다는 이 지구촌 시대에, 광주대단지라는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은 오늘도 계속 복제아를 낳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거대 건설자본과 부동산 투기꾼들은 더욱 용의주도하게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벌건 대낮에 용역 깡패들이 동원되어 돈 없고 권력 없는 우리 '난장이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이른바 공권력은 구경꾼이 되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며 즐긴다. 폭력에 찌든 철거 대상자들은 높은 망루를 세우고 자신의 소중한 몸에 신나를 뿌린 채, 쓰러져 가는 삶의 근거를 지키기 위해 저항한다. 그 한 평의 땅은 그들에게는 밥이며 목숨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조그만 보금자리가 필요한 이들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부초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다. 지금 폭동의 기억조차 아스라한 광주대단지와 그 주변은 거대한 아파트군을 가진 도시로 변해 있지만, 개발 논리의 뒤에 숨

어 그것을 추동하는 근대의 야만성은 재개발지들과 살기에 쾌적한 숲들을 어떻게 하면 이윤의 원천으로 삼을까 골몰하면서 탐욕의 추파를 던지고 있다. 청계천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흉물스런 모습을 전면에 드러낸 근대의 야만성은 청계천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 더불어 사는 삶에 자리를 내주고 우리의 곁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한 번 지켜볼 일이다. ■

참고문헌

8·10 30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2001).

박태순, 1971. 「광주단지 4박 5일」, 『월간중앙』, 10월호.

서울대 법과대학 사회법학회, 1971. 『광주대단지 빈민실태조사 보고서』.

이상민, 1971. 「빈민 집단의 사회정책적 성격」, 『정경연구』, 10월호.

장세훈, 1991. 「광주대단지 사건과 3공 도시정책의 파행」, 『월간중앙』, 3월호.

이광일 nanjangi@orgio.net | 『정치비평』 편집위원. 『시민과 세계』 객원편집위원. 논저로는 『20세기 한국의 야만』, 「민주화이행,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의 위상' 그리고 혜게모니」 외 다수.